2100년 한반도 1.2% 침수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온 2.5-3.0℃ 올라 … 정보기술센터 구축 시급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2100년에는 해수면이 1m 가량 상승해 한반도 남북을 합쳐 전체 면적의 약 1.2% 정도가 침수될 것이라는 관측 결과가 제기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광우 박사가 최근 발표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태풍과 해일 등을 고려할 때 2100년이면 한반도 최대 범람가능 면적이 2643㎢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반도의 1.2%, 여의도의 300배가 넘는 면적으로, 남북 전체인구의 2.6%인 125만5000명이 터전을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

남해안과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해안 중에서도 북한 지역의 범람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해수면 상승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침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인구가 밀집한 군산과 목포 일부 지역, 아산만 일대와 북한의 남포, 신의주 일대가 침수 예상지역에 포함됐다.

조광우 박사는 한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전담체제가 결여돼 있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것은 물론, 효율적인 대책 수립도 미비하다면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과학정보기술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성우 박사도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 2100년까지 한반도의 기온이 2.5-3.0℃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대구 북부와 구미, 김천, 팔공산 도립공원과 가야산 국립공원 부근, 북한의 평양 일대가 사실상의 사막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성우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확보와 공동활용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 등 생태계 관련 조사기관이 협조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7>